

## 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23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의 문자·숫자 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

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께 시행된다. 국회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부터 3박 4일 간의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형소법 개정안과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차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 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등 임시국회 1차 필버 법안 등 의결

'전재수-통일교 의혹' 어수선한 분위기 속 부산행... "하GPT 고향도 부산"

"삶의 터전 부산으로 옮기기 쉽지 않았을 것, 감사드린다" 공무원들 다독여

해당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를 돕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취지로 소상공인·중소기업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상 공단 관리시설 사용료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국가가 납부하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올해 12월 납부치 가운데 부족분 518억원을 각각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적극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통과

됐다. 기존에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해야 징계 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후에도 면제가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된다며 명확히 규정한 10개 부처 소관 23개 법령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제처는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및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해양수산부)' 및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과 안전관리 대책(행정안전부)'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정식을 갖는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라며 "가덕신공항 사업의 분계도 안착, 부산 지역 K문화나 K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법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글썽 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사직한 것과 관련해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봉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중앙지법에 전담 영장판사도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개정안은 내일 표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

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밝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

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표결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사위)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로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

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

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아울러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심귀영 기자

수원도시공사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신호탄  
수도권 첨단과학 클러스터의 중심

탐동 이노베이션벨리

